

하이패스·교통카드·신용카드 “NO”



‘현금 만 먹는 하마’ 광주 제2순환도로

맥쿼리 등 민자사업자 ‘배짱’
시민들 10년 넘게 불편 감수

민자 유료도로인 광주 제2순환도로 요금 지급 방식이 개통 10년이 넘도록 시대에 뒤떨어진 현금지급만 가능해 시민은 물론 외지 방문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은 물론 차량 이동량이 급증하는 봄 날들이 철을 맞아 불편을 호소하는 향의가 빗발치고 있는데도, 광주시와 민자사업자 측은 시민편의는 외면한 채 수년째 하이패스 설치 주체를 놓고 신경전만 벌이고 있다.

2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IC~소태IC·5.67km·10차로·2001년 개통)과 3-1구간(호덕IC~풍암택지·3.53km·10차로·2004년), 4구간(서창IC~산월IC·4.5km·12차로·2007년) 요금소 등을 통과하려면 소형차 기준으로 현금 1200원을 내야 한다. 차량 장착률이 70%대에 육박할 정도로 대중화된 하이패스 시스템은커녕 접촉식 교통카드(전자지급) 시스템조차 없기 때문이다. 전국 자치단체 중 접촉식 전자지급 시스템조차 없는 유료도로는 광주제2순환도로가 유일하다. 제2순환도로 3개 구간 왕복기준으로 4개씩 총 12개 차로에 하이패스를 설치할 경우 70억원 정도(1차로당 5억원)의 설치·운영 비용

어? 성경이 읽어지네!
4월 3일(금)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4시 (10주 과정)
구약 과정 개강 062) 605-1112
광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이 예상된다.

결국 하루 평균 12만대가 넘는 광주 제2순환도로 이용객들은 톨게이트 진입에 앞서 미리 현금을 준비하느라 교통사고의 우려는 물론 출·퇴근 시간 등에는 극심한 체증을 호소하고 있다.

제2순환도로 1구간으로 출·퇴근을 한다는 김지훈(42)씨는 “현금을 주고 받는 탓에 차량정체가 심하다. 전국 어디에도 현금만 받는 유료도로는 없을 것”이라며 “자신의 배만 불러려는 순환도로 사업자와 이를 방지하는 광주시의 행정에 화가 치민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하이패스 설치를 검토해 왔지만, 제2순환도로사업자인 맥쿼리 등이 설치비용 투자를 거부해 진전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민선 6기 들어 ‘시민불편 해소’가 우선’이라는 시정방침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설치·운영 비용을 일정 부분 부담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맥쿼리 등 민자사업자들은 광주시와 맺은 협약서내에 시에서 추가 설치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는 입장만 고집하고 있다.

수익창출이 우선인 민자사업자들이 되레 고객편의 시설 설치를 거부하는 것은, ‘불편하다’는 이유로 도로 이용객이 줄더라도 광주시에서 ‘시민형세’로 적자액만큼 보전해 줘야 하는 ‘एं터리 협약’이 맺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편의시설을 확충해 이용객만 증가해 봤자, 되레 도로관리만 힘들어져 굳이 제 돈까지 들여 고객을 끌어들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조만간 맥쿼리 등 민자사업자와 만나 하이패스 설치·운영비 부담 문제를 재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누리예산 ‘핑크’...보육대란 현실화

“보육료 60억원 집행 불가”
시교육청, 광주시에 통보
보육교사 1600여 명
4월 급여 못 받을 처지

광주지역 1600여 보육교사들이 4월 급여 제때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 시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보조금 4월분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누리과정 보조금 4월분 지급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날까지 집행예산 60억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24일까지 광주시에 교부해야 할 보조금은 줄 수 없게 됐고, ‘보육료 대란’은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2일 광주시가 요청한 ‘누리과정 보조금 4월분 교부’에 대해 “현재는 어렵다”고 통보했다.

광주시교육청은 공문에서 “현재까지 정부의 목적예비비 배정이 지연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 “광주시가 선지급한 3월분 60억원과 4월분 60억원의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누리과정 보조금을 2개월분만 편성한 광주시교육청은 예산비 바닥까지 지난달 광주시에 3월분 보조금 선지급을 긴급 요청했다. 당시 광주시는 4월말 상황을 조건으로 3월분을 지원해줬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이날까지 예산을 확보에 실패하면서 4월분을 지급하지



보리밭 ♥ 사잇길 23일 전북 고창군 공음면 학원관광농장. 취재용 드론을 띄워 하늘에서 내려다본 청보리와 노란 유채꽃이 어우러진 산책로가 산중객을 유혹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못하게 됐다. 광주시도 추가 지원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지역 누리과정 보조금은 월 60억원으로, 1600여명에 달하는 누리과정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된다. 광주 시교육청이 매달 25일께 광주시에 60억원을 교부하면, 광주시는 각 자치구에,

각 자치구는 카드회사(45억원)와 보육교사(15억원)에게, 카드회사는 어린이 집에 지불하는 구조다. 첫 단추가 꿰지 않으면서 보육대란으로 확산되는 구조다.

보육교사 1600여명의 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공과금 체납, 자녀 교육비

부족 등 연쇄 파장이 우려된다.

오경자 광주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은 “누리과정 보조금은 1600여 보육교사들의 생계비”라며 “광주시교육청은 정부의 목적예비비 배정만 기다리지 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참여정부, 더러운 돈 받고 사면 안했다 나를 타깃 삼으면 부메랑 맞을 것”

문재인 대표, 특검도입 주장

세정지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3일 ‘성안중 리스트’ 파문과 관련,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권 차원의 불법정치자금”이라며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불법대선자금 수사의 경우 더러운 돈의 용처를 밝혀야 하고

반드시 특검에 맡겨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나 “특검을 도입하더라도 검찰 수사가 중단되면 안 되며, 특검 작동 때까지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특검의 공정성이 담보되는 것이 제가 지향하는 특검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특히 “의혹 당사자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현직에 있었던 사실을 밝

힐 수 없으며, 법무장관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수사에 관여해도 진실을 밝힐 수 없다”며 “의혹 당사자들은 스스로 물러나 수사를 받게 해야 하며, 법무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도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해외자원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대 규모의 예산낭비·탕진을 이대로 지나칠 수 없다”면서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사

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이 사건은 상설특검제도 좋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노무현 정부 임기 말인 2007년 만에 이뤄진 성안중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특혜 의혹과 관련, “정쟁으로 몰아가거나 야당을 상대로 물귀신 작전을 펼쳐서 안 된다”며 “퇴임하는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고려한 사면의 적절성 여부가 이번 사건의 본질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언컨대 참여정부 청와대에는 더러운 돈을 받고 사면을 다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강조한 뒤 여당 일각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새누리당이 사면을 갖고 저를 타깃으로 삼고 있다고 하면 더 부메랑을 맞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로운 교총
인성교육실현

살아있는 교총
행동하는 교총
연구하는 교총

교총의 연금개혁 방향은 교원의 자긍심 회복과 국민의 노후 안전판을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육 훌륭한 선생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국민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 우리 자녀들을 위해 교원들이 지난 날 국가건설자(Nation Builder)의 열정과 자긍심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십시오!
 - 공무원연금법 개정 과정에서 107만 교원과 공무원은 ‘철밥통’, ‘세금도둑’ 등 국가파괴자(Nation Destroyer)로 매도되어 국가건설자로서의 자긍심과 애국심이 부끄러움과 절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교원들은 닥쳐올 공무원연금의 자기희생을 감내하며, 오로지 우리자녀와 공교육 회생을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교원이 개혁의 대상이 아닌 주체가 될 때 국가 백년대계도 바로 설 수 있는 만큼, 국민여러분! 교원들의 헌신에 따뜻한 한 말마디의 격려를 보내 주십시오!
- 교총은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무엇보다도 국민의 뜻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국가운영의 기반인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함께 막아주시십시오!
 -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직업공무원제도의 핵심 근간은 공무원연금 제도로써 국가운영의 기본 틀로 정립된 제도입니다. 민간대비 78%의 보수수준, 39%수준의 퇴직금, 영리 및 겸직금지, 징계시 1/2 연금삭감, 기타 기본권 제한 등을 퇴직 후 연금으로 일정부분 대신토록 하여, 재직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토록 한 것입니다.
 - 때문에, 교총은 교직(공직)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단순 재정문제를 내세워 공무원연금의 틀을 뒤흔드는 방안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도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헌법적 가치인 직업공무원제를 꼭 지켜주시십시오.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합니다!

- 하루속히 교원·공무원이 공감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의 자기희생에 따른 인사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 이해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은 여차피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가의 장래를 위해 눈물겨운 협상에 임하고 있는 총정을 헤아려야 합니다.
 -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대화는 정부·여당이 얼마나 성의 있는 자세로 교직 등 공직사회의 인사정책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내놓느냐에 달려있습니다.
- 공무원연금의 자기희생을 감내하는 만큼, 국민연금 강화 등 국민노후를 위한 국가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 교총 등 당사자 단체들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이분법적, 대립적 접근이 아니라 공적연금이라는 테두리에서 국민노후의 안전판 마련을 위해 함께 뛰고 있습니다.
 - 교원·공무원을 포함한 국민노후의 생활보장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OECD 선진국가 수준으로 공무원·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국가 책무를 강화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교총은 교원·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相生’하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자기희생을 감내하며 협상에 임하는 고통을 이해해 주십시오!
직업공무원제의 핵심 근간인 공무원연금 제도와 인사정책적 측면의 개선을 통해 후세대를 위해 가르치는 일에 더욱 헌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십시오!